



# 인도 금융시장 불안과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인도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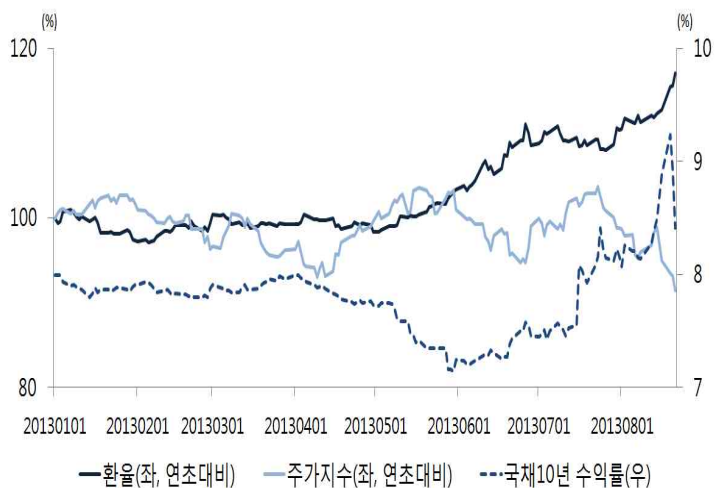
- 인도는 최근 9년 동안 연평균 7.9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(2011년 1/4분기 9.9% → 2013년 1/4분기 4.8%).
- 미 연준의 2013년 7월 말 회의록에 따르면,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제상황 개선을 전제로 2013년 내 월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규모 축소 방안에 대하여 공감한 것으로 알려짐.
-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 루피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어 2013년 8월 21일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은 연초 54.68에서 17% 상승한 64.03을 기록함.
- 인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8월 19일 연초대비 1.24%p나 상승한 9.24%를 기록한 바 있으며,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어 인도 주가지수인 센세스 지수가 연초대비 약 9% 가량 하락함.

〈그림 1〉 인도 분기별 경제성장률



자료: Bloomberg.

〈그림 2〉 2013년 인도 환율, 주가지수, 국채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■ 인도 중앙은행(RBI)은 2013년 들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.

- 인도 중앙은행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2012년 말 8%에서 2013년 5월 7.25%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.
- 그러나 루피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7월 15일 은행 간 대출금리를 10.25%로 2%p 상향 조정하고 7월 30일 기준금리를 7.25% 수준에서 동결하였음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금융시장 불안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장기간 지속된 인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함.

- 인도 경제는 관료주의, 취약한 인프라구조, 만성적인 경상적자 등 구조적 문제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 경제에 투자를 지속하였다고 분석함.
-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음.
- 자금 이탈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이 인도 제조업 및 광업 부문의 원자재 수입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고,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.

■ 그러나 인도 정부와 세계은행(World Bank)은 인도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함.

-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대 9개월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, 1991년과 같은 위기의 재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.
- 카우식 바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가 2,800억 달러에 이르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(IMF)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.

■ 계속되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전체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,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
-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여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구조가 건전해졌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, 전체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신흥국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누적 및 외국인 자금유출 현상이 나

타났으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,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입,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.<sup>1)</sup>

- 다만, 금융산업의 경우 신흥국 투자 펀드의 수익률 악화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, 보험산업의 경우도 신흥국과 관련한 변액연금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(Financial Times, 연합뉴스 등)

---

1) 기재부,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.